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경기도 민선 6기, 복지분야 전반기 분석과 후반기 방향

01 주요 내용

-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경기도의 점수는 75점
 - 공약이행완료, 201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지도 등 5개 분야의 합산 결과
 - 목표달성 및 주민소통에 있어서는 90점을 넘었으며 공약이행완료는 35점 이상을 차지
- 당초 공약**은 6대 분야 109개 과제이며, 이 중 복지와 관련된 공약은 22개(20.0%)
 - 분야별로는 저소득층 5, 노인 4, 보육 4, 장애인 3, 사회적경제 2, 종사자 처우개선 1, 복지와 일자리 통합 1, 보건 1, 다문화 1
 - 대부분 추진 중이며 가시적인 성과는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통한 복지와 일자리 통합, 보육사업 공영제 등 소수
 - 특히,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100인의 원탁토론' (7.4.)에서 복지 분야는 일하는 청년 통장사업과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프로젝트 등 2개에 불과
- 민선 6기 전반기 복지분야 추진 사업을 공약중심으로 분석하고 후반기 방향을 제안
- **저소득층 분야** : 상반기 저소득층 관련 핵심 사업은 '해봄프로젝트'이며, 이 외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무한돌봄, 긴급복지지원 등)이 진행
 - 지난 해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욕구에 맞춘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대상자가 40% 증가하였으나, 수급자에서 탈락하였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가 약 46만 가구이고,
 - 상대빈곤율도 15.7%***로 전국(14.6%)보다 높아 빈곤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국내외 경제 상황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근로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형 생활안전망 구축이 필요
 -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더하기 프로젝트' 확대, 무한돌봄사업을 경기도형 생활보장사업으로 전환, 제2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통한 복지와 일자리 연계 등
- **노인 분야** : '어르신문화즐김센터 운영',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치매종합지원 서비스 체계구축' 등은 정상 추진 중이라는 평가
 - 어르신 문화즐김은 어르신 새싹 동아리지원('9988톡톡쇼') 사업으로 변경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어르신 행복촌은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식(AIP, Aging in Place)로 전환하여 추진 중
 - 노인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빈곤의 경우 상대빈곤율은 43.3%***로 OECD 평균(12.6%)보다 약 3.4배 높고 기초연금 수급율은 57.1%에 불과(전국 68.8%)하지만 관련 사업은 미흡한 상황
- 노인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예, 기초연금 소득환산 기준 변경 요구) 마련과 함께 노인 세대대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의 복지 수요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대책이 필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발표(6.20.)

** <http://namkyungpil.gg.go.kr/chart> 참조함

***경기도민 복지 욕구 실태조사 (2016, 경기복지재단)

- **장애인 분야** : 장애인 권리보장(콜택시 증가, 따복택시 도입, 저상버스 연가 100대 증차)과 장애인 맞춤형 지원이 주요 공약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나, 저상버스 및 장애인의료 지원은 저조한 상황

 - 저상버스 연간 100대 증차와 장애인지원 중 도비장애수당,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의 사업 실적은 미미
 - 장애인이동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시군 간 광역이동이 빈번한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이 절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5.12)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장애인 생활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필요**

 - (거점기관 지정, 운영) 장애인의 접근성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 적정 규모의 '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 지정·운영' (지역 기관) 주치의, 보건소, 복지관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질환 관리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상대빈곤율이 36.4%***로 생활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3만원 인상 추진
-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분야** : 일자리 창출 관련, 2014년 광역 부문 대상, 2015년 종합대상 수상 등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

 - 16년 5월 실적 일자리 창출 개수는 15.7만개, 전국대비 60.1% 수준
 -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신설하였으나 해당 분야 일자리 창출 실적은 미미한 수준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발굴 육성 지원은 2015년 총 1,934개가 진행되었으며, 따복가게 오픈(10개소), G마켓 등 온라인 입점(30개사), 롯데몰 입점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 등 진행
 - '일하는 청년통장' 5백 명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후반기에는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시급함
- **민선 6기 후반기에는 따복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를 위해 근거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통한 취약계층 고용이 이뤄질 수 있는 영역 발굴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
- **주거복지 분야** :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은 일률적인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이라는 물량 위주가 아닌 아닌 수요자 맞춤형정책을 개발하여 일정 부분 성과를 보임

 - '따복마을', '햇살하우징' 286호 개·보수, 'G-Housing 리모델링' 182호 추진, '무한돌봄 사랑의 집수리' 500호, 기존 주택 전세·매입임대 3만 7천여 호 지원 등의 정책을 전개
 - 맞춤형 주거복지를 정책을 통해 2015년 주거복지연대가 선정한 '주거복지실천대상', '임길진 주거복지특별상' 을 수상
 -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주거급여를 제공받는 가구는 116,447가구이며, 월평균 급여액은 12.2만원이지만, 경기도 임대료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경기도의 높은 임대료 등 주택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당초 공약인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을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를 위해 교육급여와 같이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
- **전달체계 분야** :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맞춰 시군 및 읍면동을 지원하는 '경기도추진단' 을 선제적으로 구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시군과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과 역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식적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가(경기복지재단)와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였다는데 큰 의의
-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전담인력이 합동으로 118개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체계 구축 지원**

 - 경기도는 행정적 지원, 경기복지재단은 2015년 5개 시를 대상으로 한 전달체계 모델 개발 경험을 토대로 동장-팀장-담당자 등 대상별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수행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과 경기도 수급자 변동 추이

오는 7월 1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기존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임

- 정부는 지난해 진행된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통합급여의 '전부 아니면 전부' 라는 맹점을 보완하고 비수급가구(사각지대)에 대한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지난해 제도개편으로 기존의 통합급여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분리되면서 급여별로 상이한 선정기준을 신설
 - 새로운 선정기준에 따라 기존의 수급자가 탈락하거나 기존의 비수급자가 수급자가 되는 등 수급자 구성 및 규모에 다소의 변화 발생
- 경기도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규모는 개편 이전부터 올 5월까지 유사한 규모이며, 의료 및 주거급여는 소폭 확대, 교육급여는 두 배 이상 대폭 확대
 - 도내 시군 대부분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급자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오산·가평·연천의 경우에는 개편 이후 수급자 규모가 감소
 - 급여유형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개편 직후 21개 시군에서 수급자 규모가 감소했다 다시 개편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 규모는 개편 이전보다 월등히 확대

(표) 도내 시군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규모 현황

시군	2015. 6.		2015. 9.			2016. 5.			
	통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경 기	188,565	185,574	204,972	207,622	34,342	188,545	213,860	216,775	71,682
수 원	13,629	13,310	14,854	14,625	2,236	13,772	15,487	15,259	4,960
성 남	15,353	15,599	16,965	17,145	2,743	15,630	17,486	17,616	5,891
부 천	13,224	12,831	14,202	13,999	2,102	13,228	14,987	14,689	4,612
용 인	5,685	5,607	6,015	6,174	948	5,730	6,300	6,496	1,609
안 산	14,112	13,778	15,672	16,678	3,416	13,884	16,552	17,789	6,611
안 양	7,390	7,198	8,166	8,064	1,652	7,155	8,357	8,203	2,815
평 택	7,951	7,720	8,677	8,677	1,534	7,931	9,087	9,081	2,892
시 흥	6,115	5,872	6,487	6,415	1,223	6,090	7,023	6,899	2,648
화 성	5,147	5,428	5,694	5,777	926	5,244	5,840	5,856	2,229
광 명	4,607	4,623	5,137	5,184	852	4,734	5,422	5,516	2,257
군 포	3,898	3,802	4,329	4,380	701	3,933	4,436	4,626	1,667
광 주	3,887	3,697	4,111	4,027	793	3,675	4,138	4,004	1,476
김 포	5,036	4,793	5,285	5,243	680	5,000	5,595	5,548	1,692
이 천	3,453	3,374	3,743	3,649	517	3,401	3,927	3,811	1,239
안 성	4,604	4,367	4,837	4,807	828	4,398	4,904	4,937	1,316
오 산	2,435	2,551	2,644	2,758	472	2,337	2,656	2,740	1,100
하 남	2,048	2,009	2,273	2,226	296	2,238	2,602	2,523	916
의 왕	1,272	1,296	1,355	1,627	221	1,336	1,425	1,753	531
여 주	3,278	3,307	3,581	3,581	677	3,346	3,662	3,589	1,020
양 평	2,756	2,743	2,978	2,900	377	2,789	3,012	2,920	770
과 천	807	840	910	909	151	724	884	846	210
고 양	14,332	13,997	15,418	15,935	2,385	14,446	16,547	17,042	5,390
남양주	8,935	8,885	10,051	10,408	1,650	9,196	10,823	11,075	3,285
의정부	10,222	9,626	10,667	10,723	1,701	9,824	11,068	11,426	4,316
파 주	7,673	8,013	8,658	8,809	1,789	7,927	8,847	9,120	3,328
구 리	3,384	3,294	3,830	4,006	744	3,383	3,990	4,144	1,385
양 주	4,141	3,999	4,405	4,271	706	4,154	4,720	4,562	1,763
포 천	4,518	4,353	4,812	4,995	726	4,389	4,870	5,062	1,373
동두천	3,577	3,534	3,728	3,963	542	3,590	3,848	4,179	1,369
가 평	3,248	3,235	3,470	3,374	360	3,213	3,409	3,238	499
연 천	1,848	1,893	2,018	2,293	394	1,848	1,956	2,226	513

*단위: 명

03 FACT CHECK

송파 세모녀는 ‘세모녀법’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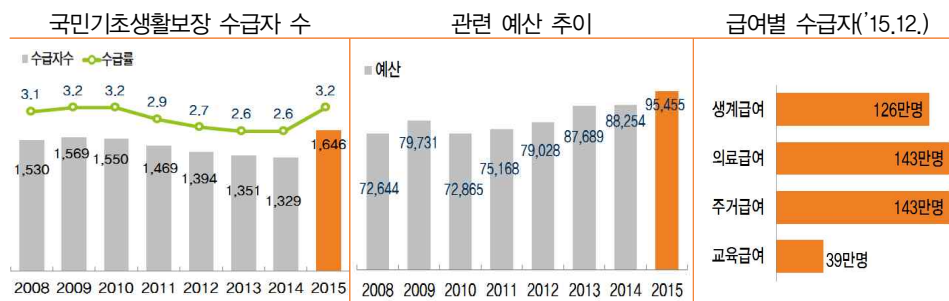
-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일어난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송파 세모녀법’ 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
 - 맞춤형 개별급여는 상대적 빈곤수준과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
- 정부는 맞춤형 개별급여의 시행으로 76만 명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 예상
 - 실제 2015년의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33만 명이 늘어났으나, 신규수급자의 대부분은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는 급여의 수준이 낮아*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도 내에 광범위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보장기관 확인소득(구 추정소득) 등이 존재하기 때문
- 맞춤형 개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여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를 제외시킴
 -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법제화는 사적부양의무의 이행을 장려하는 것으로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 추정소득의 경우, 현 지침에는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추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보장기관의 확인소득’ 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 세모녀는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으나, 상위 근거인 시행령과 상충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정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
 - 지방정부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 명실상부한 맞춤형 급여정책 추진

*시행 : 2015.7.1.~

*초등학생 가구의 경우 1년에 3만9천 원

04 통계로 보는 복지

국민기초생활제도 관련 추이



자료 : 2015보건복지통계연보, 2015년 빈곤통계연보, 김용익 국회의원실(2016년 2월 13일 복지부 제출자료)

*단위: 천 명, %, 억 원

-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된 2015년의 수급자 수는 164만6천 명, 수급률은 3.2%임
 - 수급자 수는 2009년 159만9천 명에서 점차 줄어 2014년에는 132만9천 명까지 감소
 - 2015년의 수급률 3.2%는 2009년, 2010년과 동일한 수준임
- 2015년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9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01억 원이 증가
- 2015년 말 기준, 급여별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126만 명, 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각 143만 명, 교육급여 수급자는 39만 명임